

■ 사회과목 과목별 출제 비중

| 과목 | | 문항수 | 비율 |
|-------|----|----------------------------|-----|
| 법과 정치 | 정치 | 3문제 : 4번, 6번, 11번 | 15% |
| | 법 | 5문제 : 2번, 3번, 9번, 16번, 18번 | 25% |
| 경제 | | 6문제: 7, 10, 15, 17, 19, 20 | 30% |
| 사회문화 | | 6문제: 1, 5, 8, 12, 13, 14 | 30% |

■ 출제 경향

문제유형은 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사례를 준 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골라 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전 2000년 초반 사회과목이 공무원 필수였을 때와 현재 기능직 전환시험에서 간간히 존재하는 단답형의 개념 문제는 없다. 또한 수능유형에서 존재하는 추론문제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 기출문제와 수능 유형의 중간 형태로 내신형 문제에 가깝다.

■ 대책

이론을 개념 중심으로 빠지는 내용 없이 정리하면서 기존의 공무원 기출문제와 수능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 보면 예시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렵지 않게 대비대리라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 사회는 다른 과목에 비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론을 너무 빈약하게 대비하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이 빠지는 내용 없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책을 보면서 수능 유형 분석과 과거 공무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되어 있는 책을 선별하여 학습하여야겠다. 그리고 당부할 것은 사회는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여도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공무원과 수능 기출문제 정도는 빠짐없이 풀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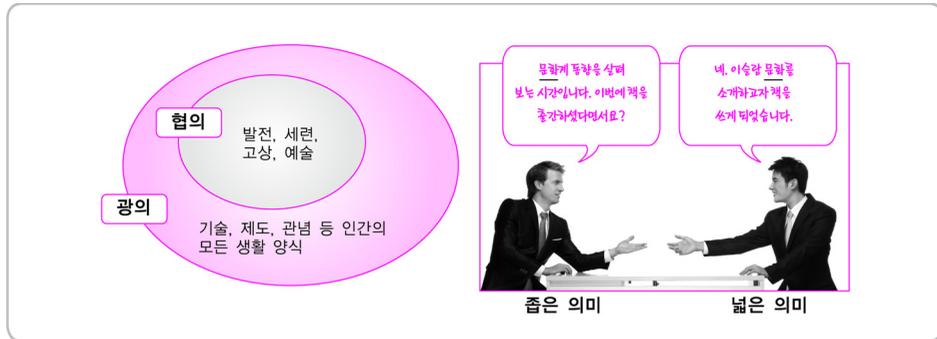
01 (가), (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문화인, 문화 생활, 문화 상품권
 (나)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청소년 문화

- ① (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가), (나)의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 ④ (가)와 달리 (나)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 해설** (가)는 교양, 보다 발전된, 예술적인 것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고, (나)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다.
 ② 기계를 발전된 물질 문화로 본다면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나 지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표현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부록

02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 ① 사적 자치의 원칙
- ② 계약 공정의 원칙
-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정답 ①



①번의 경우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므로 새로운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03 (가)~(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재판 청구권, 청원권
- (나)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 ① (가)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 ②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③ (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 ④ (나)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인 반면, (다)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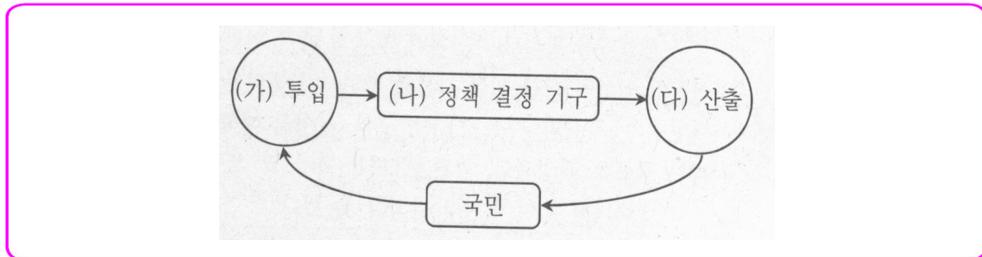
정답 ①

- 해설 (가)는 청구권적 기본권(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 (나) 사회적 기본권, (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다)를 의미한다.
 - ③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는 (나)이다.
 - ④ (나)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고, (다)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 분류 |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생활권) |
|---------|---|---|--|
| 내용 | 개인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담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을 구성할 권리 |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 강조시기 | 17, 18C(대국가적 효력 강조하던 시기) | 19C(대국가적 효력 강조하던 시기) | 20C(대국가적·대사안적 효력 강조하던 시기) |
| 국가와의 관계 | 국가로부터의 자유 | 국가로의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 |
| 국가의 존재 | × | ○ | |
| 성격 (1) | 소극적, 방어적 | 적극적, 능동적, 수단적 | 적극적, 실질적 |
| 성격 (2) | 천부인권적, 포괄적 | 실정법적, 열거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적법절차의 원리 - 영장주의 - 구속적부심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연좌제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이자 의무 • 국민투표권 • 선거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만 19세 이상 • 공무담임권 : 피선거권·공직 취임권 등 * 피선거권 : 대통령은 만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받을 권리 • 근로자의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환경권 • 혼인, 가족, 모성 보호, 보건 등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금지, 묵비권 행사 - 미란다 원칙 - 형법 불소급의 원칙 - 소급입법 금지 • 정신적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직업선택·주거·사생활·통신·재산권 보장 | 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의원은 만 25세 이상 |
|--|----------------------------|

04 다음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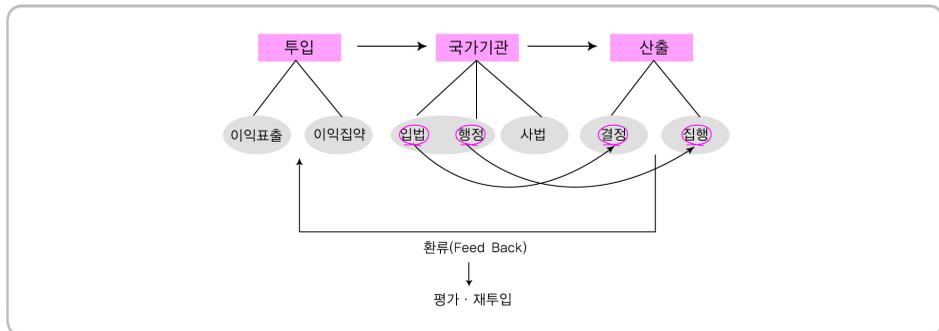


부록

- ① 국회의원 선거는 (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오늘날에는 (나)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가)는 (다)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정답 ④

해설



그림은 David Easton의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투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나타내고, '산출'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의미한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공공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익 집단

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각자의 상황 및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안 마련에 참여한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이후 문제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통 선거나 정당, 이익집단 활동, 여론 등을 통해서 평가가 구체화되는데, 이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반영한다.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투입'에 해당하는 시민의 요구와 지지, 반대 의견의 제시, 공청회 활동 등이 억압되고 표출되기 어렵다.

05 사회 이동 유형인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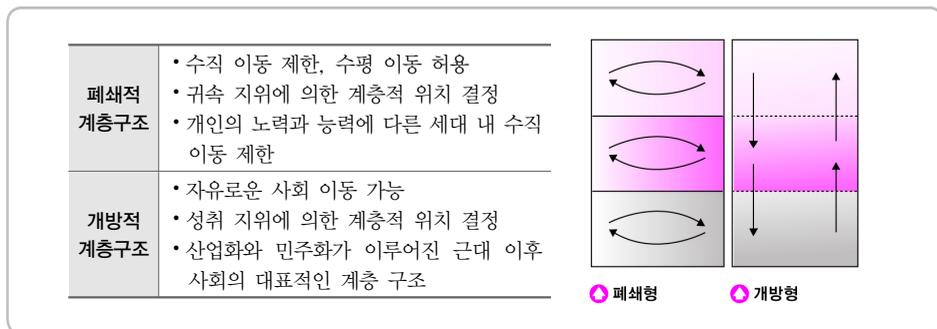
- (가) 세대 간 이동 (나) 세대 내 이동 (다) 구조적 이동

-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가)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할 경우, 그의 사회 이동은 (가)에도 해당한다.
- ③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는 허용되지만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가), (나), (다)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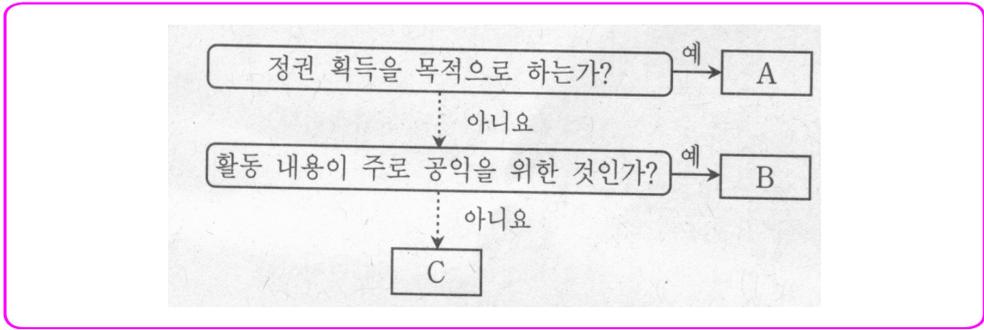
해설

| | | |
|-------|---------|-------------------------------------|
| 이동 방향 | 수직 이동 | 계층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사회 이동 |
| | 수평 이동 | 동일한 계층 내에서 위치가 변화하는 사회 이동 |
| 이동 기간 | 세대 간 이동 |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 변화 |
| | 세대 내 이동 | 한 개인의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 변화 |
| 이동 주체 | 개인적 이동 | 주어진 계층 체계 내에서 개인적인 위치의 변화 |
| | 구조적 이동 | 구조적인 사회 변동(전쟁, 혁명 등)에 따라 나타나는 위치 변화 |



폐쇄적 계층구조는 계층 간 수직 이동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계층구조로서 세대 내 이동이나 세대 간 이동 모두 불가능 하다.

06 다음 그림은 정치 행위 주체를 A~C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A~C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중의 하나이다)



- ① A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 ② A는 특수한 영역에, C는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 ③ A, B, C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 ④ C는 A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정답 ②

| 해설 | 정당 | 이익단체 | 시민단체 |
|----------|--|--|--|
| 목적 | 정권 획득 |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 | 공동체적 정신이나 공공선 실현 |
| 역할 및 특성 | ① 정치적 충원 : 정치 지도자 양성, 후보추천 ② 정치 사회화 : 정치적 관심 제고, 정치 교육 ③ 매개적 역할 : 정부와 의회, 정부와 국민 연결 | ① 특수 이익 대변 ②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 ③ 정부 정책에 대한 압력 ④ 정부와 시민 간의 의사 소통 기여 | ① 비영리성 ② 비당파성(특정 정치세력과 유착 경계) ③ 공익성(시민전체의 삶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④ 도덕성(시민단체의 중요한 생명력) |
| 구별 및 공통점 | ① 포괄적 이익 ↔ 이익단체(특수이익) ② 공익적 = 시민단체 ③ 공개적, 민주적, 합법적 ↔ 비밀 결사 ④ 정치적 책임 부담 ↔ 시민단체, 이익단체 | ① 일단 이들은 공식적인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단체 ②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③ 자연발생적인 단체(조직 또한 법적인 기구가 아님) ④ 비공식적 참여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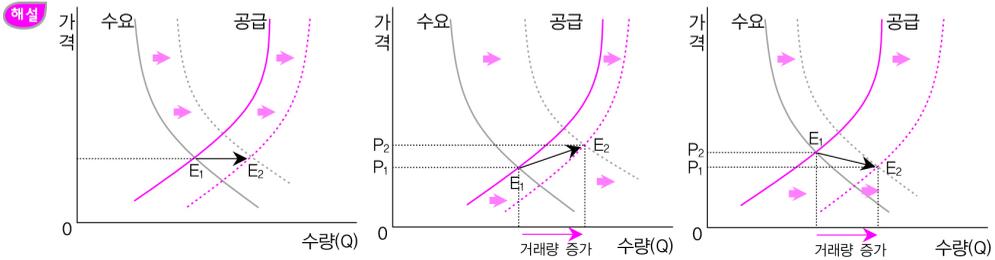
부록

07 다음 상황에서 A재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A재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였다.

- 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 ②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불변이다.
- ③ 균형 가격은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 ④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④



수요와 공급의 이동폭이 같은 경우 수요곡선의 이동폭 < 공급곡선의 이동폭 수요곡선의 이동폭 < 공급곡선의 이동폭
 수요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은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08 (가)~(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 (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 ①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사회 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상 기초 노령 연금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정답 ④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
| 대상 | 보험부담능력이 있는 국민 | 생활 무능력자 | 불우계층, 취약계층 |
| 비용 부담 | 국가, 국민, 기업 (3자부담) | 국가가 전담 | 국가, 지자체 |
| 목적 |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소득 상실로 인한 미래 생활 불안에 대처 | 최저 생계 보장 | 자활 능력을 위한 비경제적 지원 |
| 종류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노령 연금 제도) 등 |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강제가입 • 공공부조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짐 • 근로의욕 고취 • 사보험과 달리 비영리적 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 복지병과 같이 근로의욕 감퇴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재할, 직업훈련, 직업 알선, 심리상담 등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생산성 및 근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

(가) 사회보험, (나) 공공부조, (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8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0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목 : 3월 15일 ㉡ 한-미 FTA 발효 개시
 1.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 발효될 예정이다.

- ① ㉠의 장(長)은 ㉡의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 ② ㉡은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다.
- ③ ㉢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지닌다.
- ④ ㉣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효력은 20일 후에 발생한다.

정답 ②

- 해설**
- ① 조약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②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이나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미 FTA는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한미 FTA는 발효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록

10 다음 표는 A, B, C재 가격이 각각 10%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A재 | B재 | C재 |
|-------------|-----|----|----|
| 판매수입 증감률(%) | -10 | 0 | 10 |

-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 ③ B재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다.
- ④ C재 수요는 가격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답 ④

- 해설**
- ① A재는 10% 상승한 만큼 10%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완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 수요량이 무한정 변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
 - ②, ③ B재는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판매수입이 일정하므로 단위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 ④ 가격이 오른 만큼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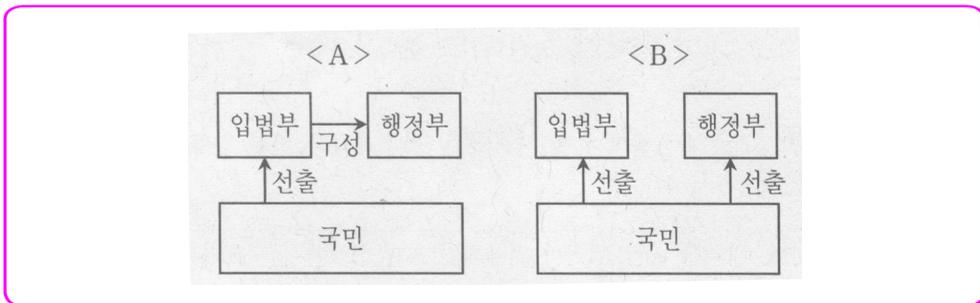
| 구분 | 명칭 | 의미 | 기울기 | 품목 | 그래프 |
|------------|---------|--------------------------|-----|---------------|-----|
| $e=0$ | 완전 비탄력적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 없음 | 수직 | 마약 | |
| $e<1$ | 비탄력적 | 수요량 변동률 < 가격 변동률 | 급함 | 생필품 | |
| $e=1$ | 단위 탄력적 | 수요량 변동률 = 가격 변동률 | 45° |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 |
| $e>1$ | 탄력적 | 수요량 변동률 > 가격 변동률 | 완만 | 사치품 | |
| $e=\infty$ | 완전 탄력적 |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동 | 수평 |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 |

A는 가격이 10% 인상될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탄력적에 해당한다.

B는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도 판매수입에는 변화가 없으므로(증감률=0), 단위탄력적이다. 단위탄력적인 경우 가격 상승률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수입은 항상 일정하다. C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 판매수입도 10% 증가했다.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 C는 수요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지 완전 탄력적이지는 아니하다
-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므로 1이다.
- ③ B재는 단위탄력적인 경우로 가격 상승률만큼 수요량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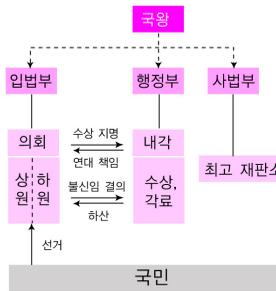
11 다음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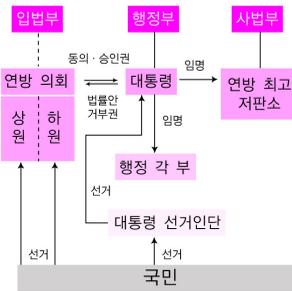
-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 ②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④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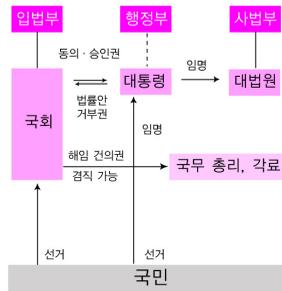
해설 ■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 혼합제



| | 대통령제(미국) | 의원 내각제(영국) |
|-----------------------|--|---|
| 배경 | ① 독립 혁명 ② 서부 개척 ③ 강력한 정부 형태 추구 ④ 행정권의 강화 추구 | ① 시민 혁명 과정 ② 군주의 절대 권력 제한 추구 ③ 행정권의 약화 추구 |
| 행정수반 | 대통령 | 수상(총리) |
| 의미 | ① 국민 → 대통령 → 행정부 ② 국민 → 의원 → 입법부 | ① 국민 → 의원 → 입법부 (다수당·소수당) ② 다수당(당수) → 행정부(총리) |
| 특징 | ① 권력분립형(견제와 균형) ㉠ 대통령 - 법률안 거부권 ㉡ 의회 - 탄핵 소추권 ②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의 선출 - 국민 ㉡ 대통령의 책임 - 국민 ③ 내각(행정부)의 책임 ㉠ 법률적 책임 | ① 권력융합형(협조와 의존) ㉠ 내각 - 의회 해산권 ㉡ 의회 - 내각 불신임권 ② 의회 중심주의 ㉠ 내각의 구성 - 의회 ㉡ 내각의 책임 - 의회 ③ 내각의 책임 ㉠ 법률적 책임 ㉡ 정치적 책임 |
| 장점 | 주어진 임기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효율적, 안정적 국정 운영 가능 ① 정국안정 - 정책의 계속성 보장 ② 신속, 강력한 행정 - 권력 분립(의회의 간섭 배제) ③ 국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 법률안거부권 |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우려하여 책임 정치 구현(법률적·정치적 책임) ① 책임정치 실현 ㉠ 법률적 책임 ㉡ 정치적 책임 ② 정책의 능률성 향상 -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시 |
| 단점 | ① 대통령의 독재우려 ② 정부와 의회의 대립시 조정 곤란 | ① 다수당의 횡포 우려 ㉠ 다수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 입법부, 행정부 동시 장악 ② 정국 불안 ㉠ 군소 정당 난립시 ㉡ 정당간 이합 집산 |
|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가미) | ① 대통령 - 법률안 거부권 ② 의회 - 탄핵 소추권 ③ 국민에 의한 대통령 선출 | ① 국무 총리 제도 ②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③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질문권 ④ 각료와 의원의 겸직 허용 ⑤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⑥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

(A)는 의원내각제, (B)는 대통령제를 말한다.

① 사법권의 독립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이며 ②, ③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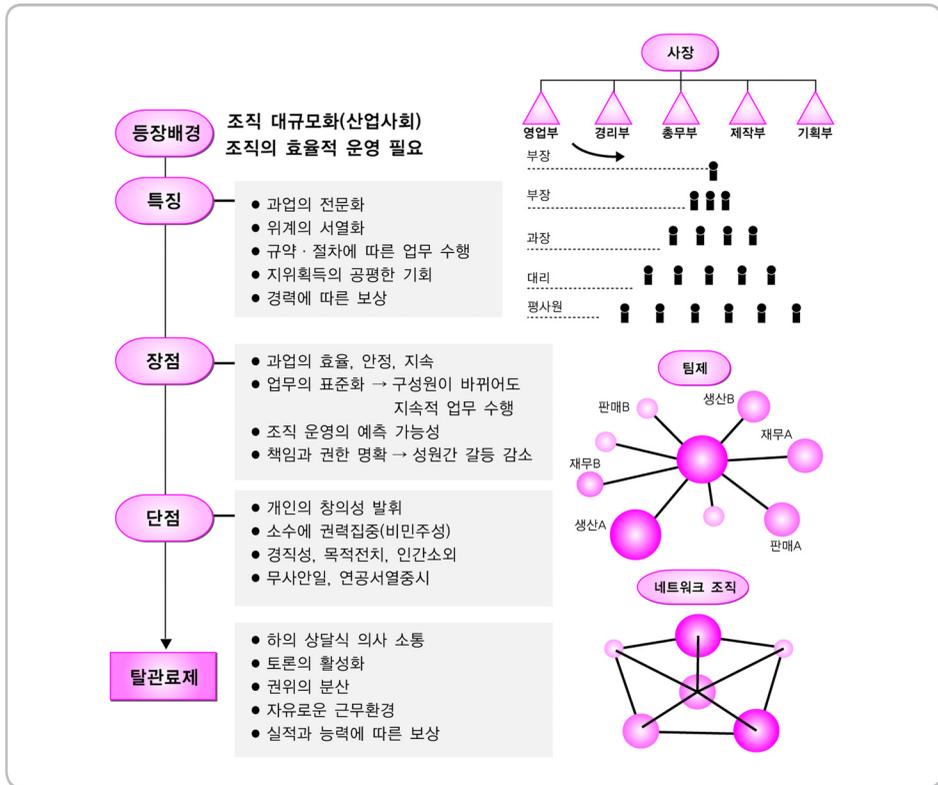
최근에 ㉠ 기업에서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 친목 도모 활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 ① ㉠은 공식 조직에,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②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③ ㉡은 ㉠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④ ㉡은 ㉠과 달리 구성원 간 수단적인 관계보다는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정답 ②

해설 공식적 조직은 대개 분명한 목적을 띠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위계 질서가 뚜렷한 편이다. 또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리를 문서로 통해 규정해둔다. **예** 회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인간관계에 의해 맺어진 조직이며 친목, 혹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동호회의 발달과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해 비공식적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예전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 회사 내의 친목회, 등산회
기업은 공식조직, 이익집단이며, 동호회는 비공식조직, 친목단체, 자발적 결사체이다.

| 구분 | 비공식조직 | 자발적 결사체 |
|-----|--|---|
| 의미 | 공식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친밀감에 따라 형성된 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통의 목적과 이해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출결이 자유롭다는 의미) • 친목, 공익, 사익 3가지 종류의 집단으로 분류가능 |
| 형태 | 회사 내 등산회, 학교 내 테니스부 등 | 조기축구회, 시민단체, 대한의사회 등 |
| 순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만족감과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 부여 • 친밀감 형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화되고 이는 공식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에게 소속감, 정서적 안정, 친밀감 부여 • 현대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에 기여하기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조직운영의 융통성, 다양성 존재 • 개인의 소외감 증대 및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발달하게 된 집단이므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 |
| 역기능 | 비공식조직 내 과도한 친분관계와 의사소통에 의해 공식조직의 규칙, 질서가 무너지고 효율성 저하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화 되면 관료제의 폐단 발생 • 비민주적운영으로 과두제화 가능 • 과도한 활동이 집단이기주의, 정부정책 결정에 혼란 초래 • 자발성에 의존한 집단이므로 다소 불안정한 조직임 |



13 다음 대화에서 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닌 것은?

갑 : 사회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을 :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제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하나로써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 ① 사회 변동은 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②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
- ③ 사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④ 사회 문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내부의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정답 ②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의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14 다음에 제시된 사회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계량화와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와 변수간의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여 일반화, 나아가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
- ②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한다.
- ④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정답 ①

- 해설
- 방법론적 이원론 :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에도 인과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측정이나 실험과 같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회 현상 연구 → 실증적 연구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
 - 방법론적 이원론 :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회 현상 연구 → 해석적 연구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

제시된 사회탐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②, ③, ④는 해석적 연구방법이다.

15 다음 표는 갑국의 GNP와 GDP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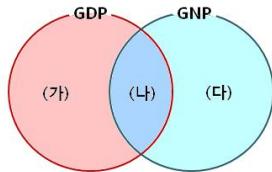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GNP | 100 | 100 | 100 |
| GDP | 100 | 110 | 120 |

- ① 2009년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0%이다.
- ② 2010년과 2011년 갑국의 GDP 증가율은 동일하다.
- ③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 요소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된다.

정답 ④

해설



GDP와 GNP의 관계

- (가) : 외국인의 국내 생산(해외 지급 요소 소득)
- (나) : 자국민의 국내 생산
- (다) : 자국민의 해외 생산(해외 수취 요소 소득)
- GDP = GNP + 해외지급요소소득 - 해외수취요소소득

-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해외 지급 요소 소득[(가)의 크기]에 해당하므로 2011년 GDP증가의 요인이 된다.
- ① 물가상승률은 전년도(2008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2008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 ② GDP의 증가율은 2010년 $10\%(\frac{10}{100} \times 100\%)$, 2011년 약 $9\%(\frac{10}{110} \times 100)$ 로, 2010년의 GDP증가율이 2011년의 GDP증가율보다 크다.
- ③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해외수취요소소득을 알 수 없다.

부록

16 밑줄 친 ㉠~㉣ 중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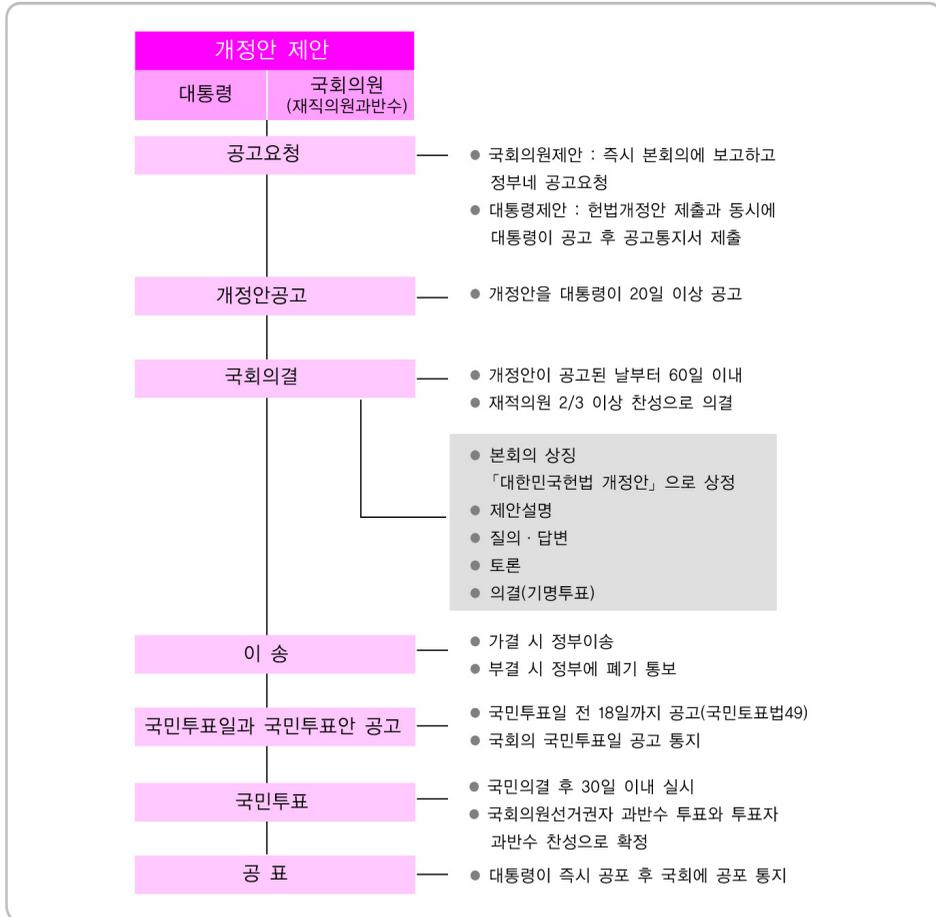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한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 정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 예시**
-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재적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명 발의할 수 있다.

■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 법률제정권

| | |
|-------------------|--|
| 법률 제정 절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안(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② 심의(소관 상임 위원회) ③ 의결(국회 본회의) ④ 공포(대통령) ⑤ 효력(공포후 20일 경과) |
| 거부권 행사시 절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환부 거부:법률안 전체 거부)-보류 거부, 법률내용의 일부만 해당하는 수정거부는 부정 ②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찬성) ③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이내 무조건 공포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

17 다음 표의 A~D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 배재성 | |
|-----|---|-----|----|
| | | 유 | 무 |
| 경합성 | 유 | A재 | B재 |
| | 무 | C재 | D재 |

- ① A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 ② B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 ③ C재의 소비 과정에서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④ D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 | | 배재성 | |
|-----|----|-----|-----|
| | | 있음 | 없음 |
| 경합성 | 있음 | 민간재 | 공유재 |
| | 없음 | 요금재 | 공공재 |

A재는 순수 민간재(빵, 사과 등), B는 공유자원(ex 하수정화시설 등), C재는 요금제(ex 케이블티비, 교통, 통신 등), D는 공공재(ex 국방, 치안 등)을 의미한다.

- 민간재 :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는, 경합성과 배재성을 동시에 가진 재화를 말한다. 민간재는 시장 기구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자원 배분상 효율적이므로,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 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이다.
- 요금제 : 공공재 가운데 비경합적 소비가 이루어지나 배제 자체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준공공재를 말한다.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아 크게 혼잡하지 않은 공원이나 교량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전기·가스·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도 요금제에 포함된다. 요금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동 소유재(공유재) :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즉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해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가 공유재다. 공유재도 민간 부문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준(準)공공재에 속한다. 이러한 공유재에는 천연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그리고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이 속한다. 공유재의 비배재성 때문에 공유재에는 과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야기된다.
-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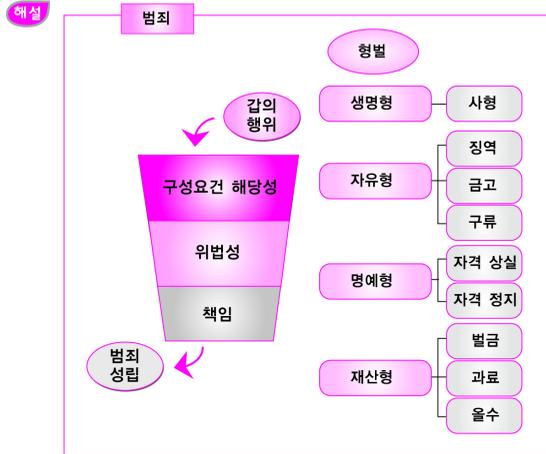
- ① A재(배재성, 경합성)는 순수 민간재로서 사적 재화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 ② B재(비배재성, 경합성)는 공유자원을 의미하는데,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 ③ C재(배재성, 비경합성)는 요금제를 의미하는데,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무임승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문제된다.
- ④ D재(비배재성, 비경합성)는 공공재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18 다음 A,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쫓아와 이를 피하려고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B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어깨를 한 차레 밀쳤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당했다.

- ①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A의 행위는 위법성, B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 ③ A, B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④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범죄 성립의 3요소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구성 요건 해당성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성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와 B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A는 긴급피난, B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된다.

19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할 때, 현 시점(5월)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 구분 | 3월 | 4월 | 5월 |
|------|-------|-------|-------|
| 원/엔 | 100 | 110 | 115 |
| 원/달러 | 1,600 | 1,500 | 1,400 |

-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
- ② 결혼 기념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온다.
-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

④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

정답 ②

해설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 ①, ②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결혼기념 일본여행을 빨리 다녀오는 편이 낫다.
- ③, ④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미루고,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20 다음 표는 갑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 구분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 활동 인구 |
|------|-----|-----|-----------|
| 2010 | 48% | 32% | 20% |
| 2011 | 42% | 28% | 30% |

$$\text{※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노동가능 인구}} \times 100$$

- ① 실업률은 불변이다.
- ②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 ③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 ④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노동가능인구}} \times 100$,

노동 가능 인구 = 경제 활동 인구 +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① 실업률은 $\text{실업자수}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2010년 실업률은 $32/80 \times 100 = 40\%$, 2011년 실업률은 $28/70 \times 100 = 40\%$ 로 서로 같다.
- ② 고용률은 $\text{취업자수} / \text{노동가능인구} \times 100$ 이므로 노동가능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므로 결국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 ③ 노동가능인구는 $\text{경제활동인구} + \text{비경제활동인구}$ 인데, 노동가능인구에는 변동이 없고, 위 도표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다.
- ④ 노동가능인구에 변동이 없을 때, 취업자의 비율이 줄었으므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 시스템을 통한 빈틈없는 사회

강태월 사회 동영상강의
www.sahoe.co.kr
6월 중 오픈!! Coming Soon!!

가장 쉽고
빠른 마인드맵
사회!

강태월 사회

8.13(월)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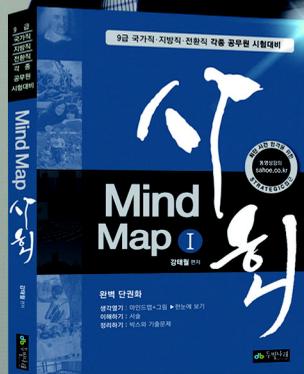
마인드맵 사회 이론단과

8월 13일 ~ 8월 31일 (연강의)
매주 [월·화·수·목·금] 18:40~22:10

- ▲ 사회 이론 전범위 이론강의와 주요 문제
- ▲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림과 서술을 통해 이해와 정리를 한번에 하는 강좌



- ★ 2013년판 최신 교재 무료 증정
- ★ 동영상 무료 제공
- ★ 행정법 수업 무료수강
- ★ 사회만 단과로 신청시 수강료50%할인



2013 마인드맵 사회

완벽 단권화

생각열기 : 마인드맵+그림 ▶ 한눈에 보기
이해하기 : 서술
정리하기 : 박스와 기출문제

(강태월 편저/두빛나라/근간예정)

마인드맵 사회 경제파트 무료특강

- ▲ 내용 : 사회 경제파트 기초부터 심화까지
- ▲ 시간 : 매주 [토] 14:00 ~ 18:00 (1개월완성)
- ▲ 대상 : 사회 공부를 하는 모든 수험생

7.07(토) 개강 사회 무료특강

